

‘선거구 획정’ 광주·전남 지방의회 선거관 ‘요동’

광역의회 광주 22→23 1석 늘어...전남 그대로
기초의회 3~4인제 여론 높아 도입 여부 관심
법률안 뒷북개정에 입지자들 “깜깜이” 아우성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광주지역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의원 정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초의회 새판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4인 선거구가 확대돼 군 소 진보정당의 약진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요약해 보면 광주는 수완동이 광역 선거구로 신설되면서 광주시의원은 현재 22명(비례 3명 포함)에서 23명

으로 1명 늘고, 전남도의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초의원 수는 광주 4개 자치구의 원이 68명, 전남 22개 시·군의원은 243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해 광역의회는 광주의 경우 남

구2, 북구1, 북구2, 북구4, 북구6, 광산3, 광산4 선거구의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전남에선 순천2, 여수3, 여수4, 여수6, 목포1, 목포4, 목포5, 나주1, 나주2, 광양2, 광양3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고, 합평은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됐다.

인구 10만 이상의 거대 선거구는 일부 구역을 떼내 미니선거구에 편입시키고,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따로 따로인 것은 교통정리하는 방식이다.

법을 개정해 따른 조례 개정으로 기초의회도 새판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4인 선거구에 대한 정

치권 안팎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어서 군소 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운신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을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양대 쟁점이다.

현행대로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할 경우 광주 북구 아 선거구(전국동, 양산동)의 경우 1인당 유권자수가 4만명을 넘어서 법적허용 인구 기준인 ‘4대 1’ (3만8064명)을 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50대 50안을 반영할 경우 구의원수는 광주만 놓고 보면 동구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고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아내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광주만 살펴 보면 전체 25개 구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구의원 59명 중 32명이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됐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한 두개 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의 의원정수와 명칭, 구역 등에 대한 조례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한 출마예정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개정 시한은 넘긴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마저 시작된 이후에 법 개정이 이뤄져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라며 “조례 개정 작업이라도 서둘러 이뤄졌으면 한다”고 고소연했다.

광주에서는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유력시된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2인 선거구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한 1명인 반면 나머지는 3~4인제를 지지하는 민주평화당이나 민중당 의원들이어서 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자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오는 12월 폐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긴급 안건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일정상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주·최효영 기자



“안전이 최고” 광주시는 5일 북구, 동구, 생활환경시설점검단, 경찰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어촌뉴딜 300’ 전남형 모델 발굴 본격화 도, 전문가분과위 구성...시설 현대화 대응 나서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 전문가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전남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

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경제적 소외지역인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선도 투자 대상 300개소를 선정해 ▲어촌관광 수요 창출형 ▲해상교통시설 정비형 ▲해양재난사고 대응형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어촌관광 수요 창출형은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확충, 유서 깊은 항·포구 복원 등이, 해상교통시설 정비형은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및 현대화, 여객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해양재난사고 대응형은 연안 구조정 전용 접안시설 설치, 출동 항로 확보 등이,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형은 ICT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및 안전난간 시설 등이 각각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관광·휴양·레저, 친수공간 등의 기능을 더한 ‘어

촌뉴딜 300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분과위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어촌뉴딜 300 전문가 분과위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전문가 그룹과 어촌뉴딜 정부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전직관료 출신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으로 구성됐다.

/최효영 기자

‘5·18 상흔’ 전일빌딩 “시민 품으로”

1~4층 시민플라자 조성... 탄흔 발견 공간 원형보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광주 1번지’ 전일빌딩 안에 시민참여 플랫폼인 (가칭) ‘시민플라자’가 조성된다.

시민플라자 조성은 시민 참여와 연대라는 광주공동체 정신과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해 철저히 광주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2016~2017년 촛불항쟁을 오롯이 지켜본 전일빌딩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민플라자를 조성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와 자유토론 형식의 ‘해커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

듯 긴 시간동안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공모 주제는 1~4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국비와 연계돼 기존 구상이 완료된 용도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민아이디어는 6~20일, 이메일(yj0211@korea.kr), 팩스(062)613-3429),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동주 기자

광주시 자동차밸리추진위 논란 2면

대북투사단 평양으로 3면

금호타이어 노조 투쟁 돌입 12면

효사랑 연중 캠페인

효

행복·감사·봉사

사랑 실천

호남매일신문이 창사 18주년을 맞이하여 효와 불우이웃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며 노인 정신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효사랑에 대한 의미와 인식을 재정립하고 효사랑이 곧 가족사랑 나라사랑임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효사랑 연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주최 | 호남매일